

급물살 탄 행정통합, 청사 위치·명칭 놓고 ‘파열음’

3차 간담회에서 1차 가안 공개 후 지역사회 반발
강기정 시장 “주청사 광주이면 명칭은 양보”
김영록 지사, 신중...오늘 최종 합의 시선 쏠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광주전남통합특별법(가칭)가 사용할 주 청사의 위치가 행정통합의 성사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주 청사는 통합특별법의 주소를 두는 곳이자 특별시장이 근무하는 장소로 의미하는 만큼, 위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와 도시발달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2·8·9·19면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통합특별법 명칭에 대한 1차 협의 가안을 공개하고 27일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견해차가 커 합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기자들을 만나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주소제지 청사는 광주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열린 3차 간담회 이후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청사는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되 주소제지를 전남으로 한다’는 가안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시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함께 꺼내는 것은 판도라상자를 여는 일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도와 상자는 열려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우려와 환란이 클 수밖에 없는 명칭과 청사 문제가 논의 테이블

에 올라와 버렸다. 이제는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더라도 청사 문제는 광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전남 동부권 주민들 입장에서 주청사가 무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광주가 더 가깝고 현실적으로 편리하다고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크다”며 “명칭은 그동안 논의돼 온 여러 안 가운데 어느 안이 되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법의 주청사 문제 등을 놓고 지역사회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주된 청사는 ‘광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법의 명칭과 청사 문제는 행정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합의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광주시의 행정통합 시민소통플랫폼에는 “주청사를 전남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통합하지 말자”는 등의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명칭과 청사에 대한 1차 가안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상호 조율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전관에서 열린 ‘시·도 통합 찬성·광주 해체 반대 시민모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지방자치법도 함께 개정해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강화라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대비하고, 광주 문제는 광주전남특별법-광주사-5개 구의 3단계 구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한 시민모임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이명자 오월여머니집 전 관장,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분주한데...” 전남도 행정부지사 ‘100일째 공석’

전남도 행정부지사 인선이 100일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각종 도정 정책과 현안 추진을 총괄하는 등 도지사를 보좌해 전남도를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백이 길어지면서 도정 조직의 안정감을 떨어뜨리고 있어 조속한 인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행정부지사 자리는 지난해 10월 16일 명장환 전 부지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퇴임하며 공석이 된 후 100일을 넘겼다.

고위공무위단 1급 자리인 전남도 행정부지사 인선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인사검증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해를 넘겨서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데다 광주시와 전남

지자체 연말 임명 예상...해 넘기고도 ‘감감무소식’
행정통합·지방선거 일정 촉박...도정 총괄 무게 커

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지사 주요 일정이 행정통합이 차지해 나머지 도정을 책임져야 할 행정부지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더욱이 올해는 6·3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2월부터는 사실상 선거체제에 들어가게 돼 도지사 공백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의 빠른 임명 절차가 이뤄져야 행정의 안정감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지사 역할을 사실상 경제부시사와 기획조정실장이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행정부지사의 무게감에는 부족해 보인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서도 도의회나 중앙부처 협의를 행정부지사가 총괄해야 하지만 이들이 대

신하고 있다.

도청 내부에서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최근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행정통합 설문조사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게 나온 것도 행정부지사 부재에 따른 조직 내부와의 소통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28일 도청 왕인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직원 설명회가 열리는데, 행정부지사를 대신해 경제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직원들에게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행정부지사 인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

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따라 도지사가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전남도뿐만 아니라 광주시까지 더해지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선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도정을 전담할 행정부지사 자리의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현재 정부에서 도 행정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선 작업이 늦어도 한참 늦어진 것을 감안해 최대한 서둘러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부지사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남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4개 지자체 부단체장 인선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최종 인선 시점을 예상할 수 없지만 100일 넘게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것을 감안해 빠른 임명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olbul@gwangnam.co.kr

혁신당, ‘합당’ 전 당원 투표로 결정

“협의의 전권은 대표에게”

조국혁신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격렬한 찬반 논의

를 했다”며 이 같은 의결사항을 전했다. 당무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당의 독자적인 비전, 가치, 정책에 기초해 당원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협의에 대한 전권은 당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합당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당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결정된 뒤 그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20면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치면 특별해집니다

내 옆에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 OK! 전남시대

지역은 더 부강하게

- 경쟁 불필요
- 특별한 보상
- 일자리 증가

복지는 더 따뜻하게

-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
- 생애전주기 돌봄 강화

교통은 더 빠르게

- 60분 생활권 완성
- 교통 할인 혜택 통합

생활은 더 즐겁게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
- 축제·행사 공동 개최

일상은 더 안전하게

- 광역 의료 체계 구축
- 의료자원 공동 활용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사·도민 소통 플랫폼